

## ‘클럽 복층 붕괴’ 수사 확대...추가 입건 · 영장 임박

과거 건물주 · 업주 등 불법증축 개입 확인...추가 입건

업주 등 입건자 8명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춤 허용 조례’도 수사...발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사망 2명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전 건물주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됐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업주 등에 대한 신변처리 방향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클럽의 변칙 영업에 합법적 길을 터주고 허술한 안전 감독의 배경으로 꼽

히고 있는 ‘특혜 조례’에 대해서도 당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 기초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7월 31일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이 입주한 건물의 전 건물주 A씨와 전 업주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앞서 입건된 업주 등

6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복층 구조물을 처음 불법 증·개축한 전 업주 B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클럽 내 복층 좌·우 구조물을 처음 설치하는 불법 증축 과정에 개입,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했다.  
수사본부는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덧씌우는 불법 확장시공이 지난 2017년 12월 있었으며, 무너진 상판도 이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앞선 불법증축과 이번 붕괴사고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A·B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 입건자는 업

주·직원·시공업자 등을 비롯해 총 8명으로 늘었다.  
수사본부는 클럽에서 총 3차례 불법 증·개축이 이뤄진 점과 시설물·이용객 안전 관리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입건된 업주 C(51)씨를 비롯해 시설물·이용객 안전 관리 소홀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법리 검토에 착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클럽이 각종 안전 관리 규제와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춤 허용 일반음식점(춤 허용)’ 조례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춤 허용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광주 서구의회 D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2016년 7월 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조례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었지만 부칙을 통해 특례를 넣었던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 부칙 2조 ‘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뒀다.  
수사본부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조례를 발의해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을 차례

로 불러 조사한다. 또 수사본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지난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일주일 뒤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청을 내고 영업을 했다”며 “붕괴 사고전후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 본다. 불법 증·개축 등 부실한 안전관리,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발단이 된 조례제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 부상을 입었다.  
조인호 기자



**짱뿔야 어디 있니?** 정마가 물러간 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강진동 강진을 남포마을 강진만 생태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더위도 잊은 채 갯벌에서 노니는 짱뿔이를 보는 재미에 폭 빠져 있다.

###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2020년 본격 시행

전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로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에 공익적 기능을 보충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

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 35도 육박 광주도 ‘이글이글’...폭염과의 전쟁

“너무 더운데(더워서) 그늘막에서 라도 쉬었다 가야제(가야지).”  
광주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사흘째 유지되고 있는 지난 7월 31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  
이날 낮 최고기온이 34.4도를 기록한 광주 도심은 불볕 더위에 찰떡꿨다.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양산·시원한 음료·부채를 들고 더위를 식하려했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다.  
팔 토시와 밀짚모자를 써도 피아별 하늘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뜨거운 햇살을 피할 곳은 그늘막뿐이었다.  
시민들은 운암사거리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녹색 그늘막에서 잠시 신호를 기다렸다. 발걸음을 옮겼다.  
김모(33)씨는 “요즘 날씨는 집에 있는 게 최고”라면서 “외출할 때에는 선글라스에 미니 선풍기까지 챙겨 불일만 보고 얼른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불볕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광주 5개 자치구도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광주 북구는 16급 살수차 2대를 동원, 도로 곳곳에 물

폭염특보 사흘째 더위 주말까지 이어질 듯  
광주시·자치구 ‘폭염 피해 예방’에 안간힘



지난 7월 3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모 교회 주변 도로에 북구청 16급 살수차가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

을 뿌려 온도를 낮췄다.  
광주시도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1285곳에서 1500곳으로 확대했다.  
냉방비 지원, 폭염 취약 계층 2500명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다중밀집지역 주변 도로 살수차 운행, 재난 안전 대책본부 가동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우산형 그늘막 쉼터 163곳 설

치, 건설·산업 사업장 등 무더위 휴식 시간제, 119 폭염 구급대 등을 운영한다.  
쿨루프(햇빛 반사 옥상 열기 축적을 감소)와 쿨링포그(도심 열섬현상 저감 장치)도 144곳에 설치했다.  
보도 온도를 저감해 보행자의 체감 더위를 낮추는 쿨페이브먼트 사업도 5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위해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